

보도시점 2024. 2. 23.(금) 15:00 배포 2024. 2. 23.(금) 15:00

딥페이크 허위정보 근절을 위해 정부-사업자 머리를 맞대다

- 방통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신속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월 23일(금)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인공지능 기술인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도록 다른 이미지·영상과 합성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회의에는 국내·글로벌 플랫폼이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 탐지 모니터링, ▲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 뮌헨 기술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자 수준의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

* '24년 선거 관련 AI의 기만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협약으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20개 주요 플랫폼.기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서명('24.2.16.)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가짜뉴스대응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기훈 (02-2110-1640)
		담당자	사무관	김은비 (02-2110-1641)

